

김일성 死後의 한반도 정세*

金 學 俊**

김일성 사망후 북한의 장래와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장래에 대해 많은 전망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함께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치의 미래, 특히 북한처럼 지극히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사회의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경우만 해도, 95년의 지자체 선거, 96년의 국회의원 선거, 97년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요, 개방사회이며, 정보가 넘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북한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의 북한,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매우 주저스럽다는 것을 전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 사망은 북한정권이 공식 발표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앞섰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일이 언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을 승계할 것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체제의 장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첫번째 대상은 김정일 체제의 장래입니다. 김정일 체제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질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 본 고의 내용은 8월 월례 동향의 강의를 녹취한 것임.

** 단국대학교 이사장, 美 피츠버그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국회의원,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역임.

기업에로의 방향을 취하는데, 도요타는 각 위성기업에 3~6명의 임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집단적 기업간 네트워크의 전망

이상에서 본 일본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의 협조와 연대는 6대 기업집단이나 대규모 종적 독립계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주요 기업들의 일반적 조직 체제라는 것이 통설이다. 왜 일본기업들이 집단화·계열화를 선호하는가는 기업전략의 산물로, 문화적 산물로, 경제발전의 역사적 산물로 설명하는 등의 이견이 있지만 활발한 기업간 네트워크는 일본의 회사자본주의의 안정성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외부 침입자에게는 배타적이므로 외국기업이나 새로 시장 참여를 기도하는 신진기업에게는 장벽으로 구조 개선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업간 네트워크의 관계적 계약과 거래는 反시장적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단기적 이윤 추구에 있어 이러한 네트워크화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상 계열기업들의 이윤율은 비계열 독립기업들의 이윤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기업간 네트워킹을 유지 내지 확장하려 하는 것은 장기적 시장점유 전략이나 기업의 경기

변동과 무관한 안정성, 경영침해 위험의 최소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이유에서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불황기를 타고 종신고용제니 연공질서제가 능력주의 계약제로, 기업도 계열기업 간의 상호보합식의 안이한 의존도보다는 독립채산제의 사업부제 등의 독립적 조직으로 기업의 경쟁성과 시장대응력을 높이려는 개혁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시도가 기존의 일본의 기업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오히려 일본 주요 기업들은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수정해 가면서 네트워크화, 계열화란 유연하고도 가벼운 기업 조직 형태로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

참고 문헌

1. Fruin, Mark W. 1992. *The Japanese Enterprise System: Competitive Strategies and Cooperative Structures* Oxford: Clarendon Press.
2. Gerlach, Michael L. 1992. *Alliance Capitalism: The Social Organization of Japanese Busines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 Smitka, Michael J. 1991. *Competitive Ties: Subcontracting in the Japanese Automotive Industry*.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4. Womack, James et als. 1990.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Rawson: Associates.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입니다.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정보입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김정일의 건강 문제입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심각한 수준의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인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김정일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의 건강은 무척 좋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정일에 대한 모략을 하고 있다”고 까지 비판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던 카터는, 김일성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북한을 통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일성은 사망하였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 상반되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장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분은

북한 공산체제의 조기, 또는 김일성 정권의 조기 붕괴를 말하고 있는데 정권의 붕괴에 앞서서 김정일 개인의 사망이 먼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김정일이 적어도 10년 이상 더 살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장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점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는 작업이 1~2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21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는 작업은 1973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제6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을 사실상의 후계자로 공인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198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을 위한 정치작업이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1983~84년 무렵부터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북한의 공동 통치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관영 언론 보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김일성이가 하던 이른바 현지 지도와 현지 교시를 내렸습니다. 1983~84년 시점에서 서방의 언론들은 “김일성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고, 김정일

은 통치하나 군림하지 않는다”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이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전면에 부상했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부터 21년 전, 짧게 잡아도 이미 10년 전에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옹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 가지 차원, 이념·제도·인사적인 차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김정일 체제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권력의 승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가 주석에 선출되는 공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북한은 현재 21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아 왔고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해온 김정일 체제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 정권의 미래는 순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일 체제의 성격

여기서 김정일 체제의 성격을 북한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지 구체제의 청산 정권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對北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게 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김정일 정권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아니라 김일성 체제의 황혼 국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김정일 체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일 체제가 구체제를 청산하는 시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21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김일성의 비호 아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플러스(+) 유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플러스 유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으로부터 그는 엄청난 마이너스(-) 유산도 동시에 물려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김일성 체제가 황혼기에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정권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번째는 국제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정권들은 거의 모두가 붕괴되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들이 모두 독립을 하였는데, 모든 공화국이 예외없이 반공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구소련을 구성했던 연방들이 현재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 親美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도 예외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하는 정권들이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구소련 연방의 해체와 동유럽 공산 국가들의 붕괴가 의미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국제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하여 베트남, 중국, 쿠바 등 4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트남과 중국은 사실 자본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예는 작년 11월에 유엔 총회의 북한 핵사찰 결의안 표결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40 개국, 반대는 북한 1 개국이었습니다.

북한은 우방국들과의 관계도 순탄하지 못합니다. 북한 정권을 실질적으로 창조하였고 북한의 실적적인 배후 지원국이었던 舊소련이 무너졌으며 그 후계국인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냉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중국 역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북

한의 교역량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교역량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군사비의 절대 규모액도 점점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정권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구소련 연방의 해체, 동구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체제 붕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지도층은 구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결론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구소련 연방의 해체, 더 나아가 공산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군備경쟁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엄청난 軍備경쟁으로 말미암아 소련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미국이 팀스파리트 훈련을 통해 북한을 軍備경쟁으로 유도하여 북한 스스로가 붕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핵개발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침체

북한은 90년 이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공업과 농업 부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원유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량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유 대금으로 경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난으로 말미암아 현재 북한의 수력발전소 가운데 40% 정도만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 부족을 일으켜 공장 가동률을 35% 정도로 감소시켰습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김정일 農法이라는 '다락밭 農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農法은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산사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냉해 피해까지 덮쳤습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의식주가 식의주, 즉 먹는것을 제일 앞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심각한 식량난은 커다란 정치·사회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1962년도에 “나는 쌀밥에, 고기국에 그리고 비단옷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1992년 신년사에서도 김일성은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식의주에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150만 명 정도의 특권층이 있습니다. 이들 특권층이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온갖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하루 두끼 먹기 운동’, ‘한달에 하루 안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은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빵 한조각을 먹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노예국가 시대에 노예들이 반란도 못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노예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반란이 일어나는 시점은 의식주가 해결될 때부터입니다.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정도 되었을 때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또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가 되었을 때 그 체제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북한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900~1,100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직까지는 체제에 대한 저항에 못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사회 통제력이 이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사람들이 공장이고, 농장이고, 어디에 서건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정권이 붕괴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이너스의 유산을 김정일 정권은 그대로 물려 받았습니다.

對北 정책 방향

김정일은 다섯 가지 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끌고 나가는 현상 유지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광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인품과 능력으로 북한 체제를 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김일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 가고 있는 체제를 현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미국 정치학에서 말하는 ‘머들링 쓰루우’라는 방식입니다. 머들링 쓰루우라는 방식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臨機應變, 즉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머들링 쓰루우 방식의 대전제는 비이념적인, 탈이념적인 합리적 결정 기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결정기구들은 모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사이비종교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충성심이 합리성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개혁과 개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일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김정일 정권에 와서도 북한은 두만강유역 공동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또 김일성 정권때 이미 만들어진 선봉·나진의 자유무역지대 대해서도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이미 개혁과 개방을 경고하는 저술(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우리는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도구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을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김일성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외국 언론인과의 회견에서 김정일은 “우리에게 자꾸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문을 열때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옵니까. 파리떼와 모기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이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또한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도 개혁과 개방이 북한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김정일 정권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회의적이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는 강경 통치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긴장을 현상태에서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사상 교육의 강화, 이념 교육의 강화, 감시 체제의 강화 등 강경 통치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이 깨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강경 통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다섯번째는 체제 붕괴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붕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일 정권은 1~2년, 기껏해야 9년 내에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정권의 붕괴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취해야 할 정책은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북한이 우리 동포인데 우리 형제자매인데 하는 민족주의적인 감상론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인 것은 틀림없지만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주변의 통치엘리트들은 동포이기 이전에 남북 분단의 책임을 져야할 장본인들입니다.

우선 북한 통치자들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재촉시키는 방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재촉시키느냐, 아니면 김정일 정권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

는 정책을 쓰느냐 하는 두 가지 정책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바람직스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절대로 곱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때 40년 이상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던 동독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될 때에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붕괴에 임박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이론투쟁, 노선투쟁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투항 세력, 저항 세력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내란이 발생할 경우, 남북한 사이에 군사충돌까지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북한정권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결코 동독이 보였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아무런 문제없이 붕괴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對北정책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부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부업을 가지고 있고 군인, 경찰도 부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만든 생산품을 암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도 자본주의의 단초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순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싶어 하는 욕망,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알도록 유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남북의 평화통일을 순탄하게 촉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문제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제협력교류를 하루빨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남북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사회는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변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의 향상을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1당 독재체제의 유지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원리가 북한 사회에 심어지게 되면 자연히 남북한 사이에 접점이 생깁니다. 그 접점을 통하여 남북한 사이에 통일이 아니라 통일 상태가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현재 통일이 아니라 통일상태입니다.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남북간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와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남북은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접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으며, 평화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면, 동북아에도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對北정책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는 동북아 전체가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장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